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3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4.

박 정 환 의원

제안설명서

제안자 :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의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4043
----------	----------

발의연월일: 2024. 4. 5.

발 의 자: 박정환, 박종길, 정창근,
도하석, 황국주, 남현주,
고명욱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
- 나.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1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각각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u>음주청정지역</u> ”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금주구역</u> ”이란 ----- ----- ----- ----- -----.
제4조(<u>음주청정지역</u> 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음주청정지역</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구청장은 <u>음주청정지역</u> 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조(<u>금주구역</u> 의 지정) ① ----- ----- ----- ----- ----- ----- <u>금주구역</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u>금주구역</u> ----- ----- ----- --. ③ <u>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u>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읍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읍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금주구역-----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제4조제5항-----

금주구역-----

-----.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u>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11조와 같음)</u></p>
--	---

【 관계 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170	330	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p>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p> <p>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p> <p>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p> <p>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p> <p>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p>	<p>법 제34조 제3항 제2호</p>	10	10	10
		5	5	5
		10	10	10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p>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제1항 제2호</p>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항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 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 조제1항 제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 조제1항 제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 조제2항 제3호	75	150	3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